

힘없이 굴복한

냉장육 유통기간 협상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모든 현실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어느 경우든 옳지 않은 것이며 현실을 정확히 판단하고 꾀뚫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S국방부 장관은 “이기회에 북진하여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며 국민은 안심하고 생업이나 열중하라고 큰 소리친 적이 있다. 현실을 낙관적으로 본다기 보다는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잠꼬대 같은 소리이었다.

이제 새로운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한미간에 합의한 바에 의하면 오는 10월 1일부터(2개월후) 냉장육의 유통기간이 돼지고기는 45일, 쇠고기는 90일로 대폭 연장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이러한 유통기간도 아예 없어지고 업자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이로써 이미 수입개방 되었으면서도 냉장육의 유통기한 문제때문에 수입이 안되던 돼지고기가 10월 1일부터는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냉장 쇠고기의 수입에 따라 품질 경쟁의 사실상 포기를 의미하게 되었다. 쇠고기는 국제간 가격차이가 커서 가격경쟁력도 없기 때문에 설자리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이 WTO에 제소되어 다자간 협상에서 각국의 의견을 들어 해결될 것으로 온국민이 기대하여 왔었다.

지금까지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비난하던 사람들끼지도 지난 실무협상에서 우리의 주장을 떳떳이 밝히고 한미간의 쌍무협상에서 WTO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는 박수를 친바 있었으나 이번 정부 조치는 너무 쉽게 무너진 것으로 정부 협상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국내 사정이 냉장육으로 유통되기 어려운 낙후된 환경에서 국민 보건보다는 미국의 통상 압력만을 생각해서 타협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66

지금까지 글목적인
협상이라고 비난하던 사람들까지도
지난 실무협상에서 우리의 주장을 떳떳이
밝히고 한미간의 쌍무협상에서 WTO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는 박수를 친바 있었으나 이번 정부 조치는
너무 쉽게 무너진 것으로 정부 협상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국내 사정이 냉장육으로 유통되기
어려운 낙후된 환경에서 국민보건보다는
미국의 통상압력만을 생각해서
타협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99

헌법 제36조 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헌법 제123조 1항에는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4항에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 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다.

과연 이번 협상으로 국민이 상한 고기를 먹게 되거나 않을지? 과연 이번 협상이 헌법 제36조 3항의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있는 헌법의 조항을 지키며 우리 현실이 수입된 안전한 축산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또한 헌법 제123조 1항 및 4항을 국가가 집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직 우리 현실이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생산 농민보다도 소비자 단체들이 UN, FAO 등에 고발하고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헌법 32조의 “모든 국

민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을 “모든 국민이 보건에 관하여 소비자 단체의 보호를 받게되는 것”으로 국가가 후속 조치의 대안을 마련하여 생산자나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앞으로 계속되는 무역전쟁과 개방압력에 “평양에서 점심먹고, 신의주에서 저녁 먹는다”는식의 무식함도 문제이며, 내자신을 스스로 과대 평가하여 2000년 2만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OECD에 가입해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선진국 운운하는 동안 소비자는 신선한 먹거리 마저 섭취를 포기 당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삼풍백화점은 무너져도 다시 지으면 되지만 농업이 무너지면 더 많은 농민이 죽게되고 다시 지을 수도 없다고 뜻있는 이들이 걱정하고 있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과 기상이변은 지금까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해 온 정부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힘들여 손해본다면서 농사 짓을 것 없이 돈벌어 수입해다 먹으면 된다고 호언 장담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